

거래에 문제가 없는데 왜 1,072 건이 제재를 받았나

이 법은 거래를 막는 대신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2025 년의 1,072 건을 위법한 거래의 적발이 아니라 신고 절차의 누락에 대한 제재로 본다. 외국환거래법은 거래를 허용하되 신고 의무를 붙이고,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은 거래당사자다. 취급기관의 확인 의무는 그 거래가 이미 신고된 것인지를 보는 데서 끝난다.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릴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 년 7 월 15 일 2025 년 중 조치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현황을 발표했다.

항목	값	비고
위반 검사	1,072 건	2025 년 중 조치
행정제재	979 건	같은 기간
수사기관 통보	93 건	같은 기간
주요 위반 분야	해외직접투자·금전대차·부동산거래· 증권거래·해외예금	
과태료 상한	5 천만원 이하	외국환거래법 제 32 조 제 1 항
신고 예외	건당 미화 5 천달러 이내	외국환거래법규정 제 7-2 조

발표는 위반의 주원인으로 신규신고와 변경신고, 보고 등 의무 불이행을 들었다. 거래당사자가 해당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적었다. 위반이 주로 나온 분야로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거래, 증권거래, 해외예금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은행 등에도 외국환거래 취급 시 의무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 제 1 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정한다. 제 32 조 제 1 항은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한 자에게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 19 조는 경고와 거래 정지를 정하고, 제 29 조 제 1 항은 일정 금액을 넘는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한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이 법이 정한 방식부터 본다. 제 18 조 제 1 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도록 정한다.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 허용하되 신고를 요구한다. 제 32 조 제 1 항은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게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재의 요건은 신고를 했는지 하나다. 그 거래로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는 요건에 없다. 그래서 거래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절차를 빠뜨리면 제재를 받는다.

발표가 든 주원인에 변경신고가 들어 있는 것을 눈여겨볼 만하다. 처음에 신고를 마친 사람도 투자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제 2 항은 최근 2 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년 이내의 거래 제한이나 정지를 정한다. 한 번의 누락이 다음 누락의 가중 사유가 된다. 처음 위반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동안 같은 거래를 반복하면 두 번째 위반이 쌓인다.

그러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 방법이 절차 안에 있는가. 해외송금과 해외계좌 개설은 대부분 은행 창구를 거친다. 제 10 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과 거래할 때 그 거래와 지급, 수령이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도록 정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신고된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신고 대상인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유인 구조는 여기서 갈린다. 은행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고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창구다. 그러나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거래당사자다. 제 29 조 제 1 항 제 5 호는 제 10 조의 확인을 하지 않은 취급기관을 처벌한다. 확인은 조문으로 강제되고 안내는 그렇지 않다. 확인을 촘촘히 하면 거래가 느려진다. 느슨하게 하면 나중에 과태료를 무는 쪽은 고객이다. 금융감독원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적은 것은, 안내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행정지도라는 뜻이다.

왜 하필 다섯 분야인지도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7-2 조는 건당 미화 5 천달러 이내의 자본거래를 신고 대상에서 뺀다. 유학비나 생활비 송금은 대개 여기 들어간다. 사람들이 이 법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이유다. 신고 대상이 되는 순간은 대개 금액이 커지거나 거래 종류가 바뀔 때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때가 처음이다. 해외직접투자자와 금전대차, 부동산거래, 증권거래, 해외예금은 모두 한 사람이 평생 몇 번 하지 않는 거래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제재를 받는 사람은 이런 처지에 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우거나 지분을 취득한 사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다.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해외 증권을 산 사람, 해외 은행에 계좌를 열어 둔 사람도 같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9-1 조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하도록 정한다.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자본거래다.

결과의 폭은 넓다. 제 19 조 제 1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위반에 대해 경고를 정한다. 그 금액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적었다. 제 32 조 제 1 항은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위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간다. 제 29 조 제 1 항 제 6 호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2025 년에 조치된 1,072 건 가운데 93 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송금은 그날 정상적으로 끝난다. 창구에서 돈이 나가고 영수증도 나온다. 신고를 빠뜨렸다는 사실은 그날 표시되지 않는다. 뒤에 검사에서 확인된다. 이번 발표도 2025 년에 조치한 건수를 2026 년 7 월에 냈다. 거래한 날과 제재를 받는 날 사이가 떨어져 있다. 그 사이에 같은 거래를 한 번 더 한 사람은 제 19 조 제 2 항의 가중 대상이 된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안내 강화는 조문이 아니라 행정지도다. 제 10 조의 확인 의무는 그 거래가 신고된 것인지를 보는 데서 끝나고,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정한 조문은 없다.

- 변경신고 누락은 이미 신고를 마친 사람에게서 나온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뒤에 조건이 바뀌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는 이 법의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 제 19 조 제 2 항의 가중은 최근 2 년 이내 두 번 이상의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첫 위반을 본인에게 알리는 시점에 관한 기준이 조문에 없어, 통지 전의 거래도 두 번째 위반으로 세어질 수 있다.
- 경고와 과태료를 가르는 금액은 대통령령에 있고 거래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같은 누락이라도 유형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그 구분을 거래 전에 확인할 절차는 조문에 없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돈을 받기 전에, 그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신고 대상인지 거래 은행 외환 담당 창구에 먼저 묻는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묻는다.
- 이미 신고한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이 있으면 투자 금액과 지분율이 바뀐 적 있는지 본다. 바뀌었으면 변경신고를 했는지 확인한다.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에 전화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신고·상담 메뉴에서 확인한다.

금융회사

- 해외송금과 해외계좌 신청을 받을 때 신고 대상 여부와 변경신고 요건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안내한 사실은 거래 기록에 남긴다. 제 10 조의 확인으로 안내를 대신하지 않는다.

당국

- 제 10 조의 확인 의무가 신고 대상 여부의 사전 고지까지 포함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다. 안내를 행정지도로 두는 동안에는 은행마다 안내 범위가 달라진다.
- 위반을 확인한 시점과 본인에게 통지한 시점의 간격을 공개하고, 제 19 조 제 2 항의 가중을 통지 전 거래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밝힌다.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금융감독원이 밝힌 은행 등에 대한 의무사항 안내 강화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행정지도로 남는지, 제 10 조 확인 의무의 범위를 넓히는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A 로 가면 · 법령 개정으로 사전 안내가 의무가 되면 거래당사자는 신청 단계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받는다. 안내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거래당사자에게만 남지 않는다.

B 로 가면 · 행정지도로 남으면 안내의 범위와 방식은 은행이 정한다.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신고를 빠뜨린 거래당사자는 그대로 제 32 조 제 1 항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외국환거래법 제 10 조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취급기관의 사전 안내에 관한 문언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은행 내규 개선 요청으로만 정리되는지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재의 종류와 효력 금융회사 검사

란	편
	금융감독 체계
금융상품	외화예금 해외주식 위탁매매
금융사건	은행 창구를 통해 15 조 9,000 억원이 무역대금으로 나갔다 환율 0.1%를 맞히는 데 1 조 3,823 억원이 걸렸다
피해 구제	무료로 도움받는 법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2025 년 중 조치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 검사 1,072 건, 행정제재 979 건, 수사기관 통보 93 건	1 차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검사 1 팀 「'25 년중 조치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2026.7.15) 원문 전채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212
위반의 주원인은 신규신고·변경신고·보고 등 의무 불이행이며, 거래당사자가 해당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212
주요 위반 분야 —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거래, 증권거래, 해외예금	1 차	위 동일. 원문 열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212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은행 등에도 외국환거래 취급 시 의무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유형별 세부 견수와 과태료 금액은 첨부 PDF 에만 있어 본문에 쓰지 않았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212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 제 1 항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는 사후보고 또는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같은 조 제 3 항은 해외직접투자자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외국환거래법 영문본 제 18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8381&cseq=913808
외국환거래법 제 10 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거래·지급·수령이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할 의무. 다만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거래는 제외	1 차	같은 법 제 10 조 조문 원문 확인. 원문 문언 "it shall confirm whether transactions, payments or receipts of their customers are permitted or reported under this Acts"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8381&cseq=913795
외국환거래법 제 19 조 — 제 15 조부터 제 18 조까지의 신고등 의무를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한 경고, 최근 2 년 이내 2 회 이상 위반 시 1 년 이내의 거래 제한·정지 또는 허가 취소, 조치 전 청문	1 차	같은 법 제 19 조 조문 원문 확인. 제 1 항 제 2 호의 금액은 거래 또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8381&cseq=913810
외국환거래법 제 32 조 제 1 항 —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18 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한 자를 포함	1 차	같은 법 제 32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8381&cseq=913824
외국환거래법 제 29 조 제 1 항 — 1 년 이하의 징역	1 차	같은 법 제 29 조 조문 원문 확인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 배가 1 억원을 초과하면 그 3 배 이하). 제 5 호는 제 10 조 확인 의무 위반, 제 6 호는 제 16 조·제 18 조 신고의무 위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38381&cseq=913821
외국환거래규정 제 7-2 조 — 건당 미화 5 천달러 이내의 자본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외국환거래규정 영문본 제 7-2 조 조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4673&cseq=1861068
외국환거래규정 제 9-1 조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	1 차	같은 규정 제 9-1 조 제 1 항 조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4673&cseq=1861138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며 신고·상담 메뉴를 두고 있고, 금감원 콜센터 번호는 1332 이다	1 차	사이트 본문 확인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527 자	12 건	12 건 (100%)	12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다음 연도 위반현황 발표에서 검사 건수와 수사기관 통보 건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취급기관의 사전 안내에 관한 문언이 외국환거래법 제 10 조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들어갔는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